

# 新年辭

다사다난했던 갑오년(甲午年)의 어둠을 뚫고, 을미년(乙未年) 첫 대양이 솟아올랐다. 2015년, '청양'(靑羊)의 힘찬 도약을 열어주는 태양은 더 새롭고, 더 크고, 더 찬란하다.

하지만 새해를 맞는 국민들의 마음은 편치 못하다. 먼저, 가장 민감하게 다가서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이다. 지난해 4월 16일 대한민국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세월호 참사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300명이 넘는 꽃다운 생명들이 희생됐지만 지금까지 어느 것 하나 달라진 게 없다.

지난 연초 경주 리조트 붕괴 사고를 필두로 21명의 목숨을 앗아간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 담양 펜션 화재 등 대형 사고가 터질 때마다 온갖 문제점과 개선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안전사고는 끊임 없이 반복돼 왔다. 국민안전처가 최근 국민안전제감도 조사 결과, 국민의 43%가 한국이 불안하다고 답한 것도 이런 이유다.

안전한 사회는 정부가 완벽한 제도와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계 부처 장·차관과 공무원, 관련기관 임직원의 철저한 정신무장이 우선이다. 또한 국민과 기업 하는 사람들의 인식과 의

식도 변화해야만 한다. 정치적으로도 불신과 불안의 연속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연이은 인사 참사와 연말을 뜨겁게 달군 '비선 국정개입 의혹 사건' 등도 불통과 무원칙이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내리막길을 걸어 처음으로 40%대가 무너진 것도 소름부족과 독단적 결정이란 데 있다. 대통령의 신년 초 기자회견이 예고된 만큼 난마처럼 얽힌 국정에 대한 해법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안을 제시

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의 '2중대'라는 비야냥까지 받고 있는 새누리당과 지난해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하고도 계파 싸움에 정신이 없는 새정치민주연합, 진보통합당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미래마저 불투명한 진보 정당 등 우리 정치는 이미 국민의 눈밖에 나 있다. 특히 새정치연합이 당 대표 경선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그들만의 리그인데 다 파열음이 일면서 분당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

다. 경제는 더욱 어렵다. 국민들은 지금 만성화된 청년실업과 일자리 불안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 고물가 등에 시달리고 있다. 1일부터 대폭 오른 담뱃값과 주민세, 공공요금 인상은 서민들을 더욱 옥죄고 있다. 기업은 기업대로 엔저 현상 등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농어민들도 FTA의 발효에 따라 쌀시장 전면 개방과 수입 농수축산물의 대거 유입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3.7%에서 3.5%로

낮춰 잡았지만 이마저 여의치 않다. 지난 2011년부터 저성장의 늪에 시달리고 있으며 디스플레이에 대한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확실한 비전을 보여 줘야 기업과 국민 개인이 희망을 갖고 의욕적으로 다시 뛸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서 한반도 정세도 불안하다. 정부는 이달 중 남북한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한 당국 간 회담을 갖자고 북측에 공식 제의했지만 대화의 길이 열릴지는 의문이다. 북한의 변화를 예의 주시하되 미·중·일·러 등과

를 분명히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자신들의 정치적 판단과 의견을 내세우거나 혹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국민 다수의 여론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지, 아니면 헌법에 보장된 소수의 기본권 보호를 우선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물론 사법부가 정치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데에는 정치권의 잘못도 크다.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사법부에 떠넘기거나, 선거구 획정 불합치 시례와 같이 심각한 문제를 방치해 둬으로써 사법부의 개입을 초래해 왔기 때문이다.

만약 정치권이 앞으로도 계속 사법부에게 정치적 판단을 맡길 생각이라면, 독일의 경우처럼 현재의 정치적 성격을 분명히 인정하는 편이 오히려 나을 것이다. 현행 대통령 중심의 판사 임명 방식을 바꾸어 입법부와 정당의 영향력을 강화함으로써, 정치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법부의 지나친 정치 개입을 줄이거나, 아니면 정치적 책임성을 증가시키거나, 이 두 가지 방안 중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면 사법부가 정치를 좌우하는 사법민주주의의 폐해가 앞으로 심각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김밀희 협조해 평화체제를 굳건히 해야 한다. 지역적으로 호남사람들은 지난해에도 답답하고, 착잡한 심경뿐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인사는 물론 예산에 있어서도 호남 차별로 일관해 온 탓이다. 이대로 간다면 향후 3년도 호남은 암담할 따름이다. 게다가 이 지역을 뒷받침여기는 새정치연합에 대한 기대도 점점 지어진다. 그렇다고 푸념과 냉소로 일관하며, 그냥 주저앉을 수는 없는 일이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새로 뽑은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등 자치단체장을 중심

으로 뚫돌 뭉쳐 새롭게 도약해야 한다. 먼저 올 7월에 열리는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야 한다. 전 세계인들이 지켜보는 U대회는 광주 나아가 대한민국의 품격을 더 높이는 일이다. 지금부터 추진 상황을 꼼꼼히 따져 개막까지 완벽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11년을 끌어온 국립 아시아문화전당도 오는 9월 웅장한 모습을 드러낸다. 이 역시 개막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문제는 문화전당의 운영 주

체를 정부가 맡아 지원하는 특별법이 적어도 이달 내에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점이다. 오는 3월부터 광주에서 서울까지 개통되는 호남고속철도는 지역경제, 사회, 문화에 이르기까지 지대 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소요 시간이 1시간 33분으로 수도권과 충청권이 반나절 생활권에 접어들게 될 것이다.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만 지방 의료와 소용 수요자들의 수도권 유출 문제에 경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올해 9월 담양에서 개최되는 세계대나무박람회와 10월 나주에서 열리는 국제농업박람회도 성공으로 이끌어야 한다. 윤장현 광주시장의 핵심 공약인 미래형 자동차산업 육성과 이낙연 지사의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실현 등도 그 기반을 닦는 첫해가 돼야 한다. 이 모두는 지역의 오늘과 내일을 기약하는 이정표라는 점에서 지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한다. 올해로 창사 63주년을 맞는 광주일보는 지역의 정당한 목소리를 높이고, 경쟁력을 키우는 데 앞장설 것이다. 나후남 광주·전남이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역의 다양한 여론을 대변하는 데 소홀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한다. 새해에는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만은 잃지 않아야 한다. 서로 돕고, 나누고 소통하면서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한 해로 만들자. 고비 때마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냈던 호남인이 다시금 지력을 발휘할 때다.

# 지역 발전을 위한 대전환의 해로

##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 光日春秋



김 옥 배재대 교수·정치언론안보학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에서 헌법재판소(헌재)의 역할이 눈에 띄게 중요해지고 있다. 권위주의 시절 행정부의 힘에 눌려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던 헌재가 민주화 이후 특히 2000년대 들어 행정부와 입법부 의견에 반하는 결정을 종종 내놓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 민주정치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대표적 예로는 지난 2004년 5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기각 결정과 동년 10월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이다. 보다 최근으로는 2014년 10월 선거구 제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12월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있었다. 이러한 헌재의 영향력과 독립성 증대는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민주주의의 원칙 중 하나인 3권 분립을 실현하는

## 사법민주주의에 대한 경계

데 도움이 되며, 나아가 입헌주의 원칙 아래서 헌법의 절대성을 수호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재의 지나친 영향력과 그에 따른 소위 '사법민주주의'가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 또한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범이 먼저인가 정치가 먼저인가라는 오래된 논쟁을 굳이 벌이지 않더라도, 법을 대표하는 입헌주의와 정치를 대표하는 민주주의와의 잠재적 갈등은 분명히 존재한다. 헌재를 포함한 사법부 인사들은 정치적으로 선출되지 않고 정치적 책임도 직접 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들에게 막강한 정치적 권한을 부여하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비롯해 미국, 독일 등 일부 민주주의 국가가 사법부에게 행정부와 입법부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위헌심사권을 부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민주주의가 기반하고 있는 다수결 원칙의 불완전성 때문이다. 다수 의견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며, 다수결 원칙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자칫 소수에 대한 다수의 횡포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헌법이 명시돼 있는 소수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헌법을 다수결 원칙의 상위에 두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권력은 남용될 가능성이

다. 헌재의 권력 또한 마찬가지이다. 특히 헌법은 추상적이라 열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사법부의 권력은 입법부나 행정부와 달리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남용의 정도와 부작용이 더욱 심할 수 있다.

위헌심사제도가 처음 시작된 미국의 경우에도 사법부가 지나치게 정치적 문제에 개입함으로써 행정부와 크게 충돌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뉴딜 입법이 계속 대법원의 위헌 판결을 받아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법원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통해 대법원의 정치적 자제를 이끌어 낸 것이다.

그 이후 미국 대법원은 소위 '자제주의'를 통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판결을 자제하고, 주로 소수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사건에 전념하는 전통을 가지게 됐다.

여기서 한국 헌재가 그 동안 내린 주요 판결에 대해 비판할 생각은 없다. 판결에 대한 평가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를 수 있으며, 이처럼 평가가 엇갈린다는 사실이 그 판결의 정치적 성격을 반증하는 것이다.

다만 헌재가 자신의 막강한 권력을 사용할 때 그 권력의 본래 목적이 무엇인가

를 분명히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자신들의 정치적 판단과 의견을 내세우거나 혹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국민 다수의 여론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지, 아니면 헌법에 보장된 소수의 기본권 보호를 우선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물론 사법부가 정치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데에는 정치권의 잘못도 크다.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사법부에 떠넘기거나, 선거구 획정 불합치 시례와 같이 심각한 문제를 방치해 둬으로써 사법부의 개입을 초래해 왔기 때문이다.

만약 정치권이 앞으로도 계속 사법부에게 정치적 판단을 맡길 생각이라면, 독일의 경우처럼 현재의 정치적 성격을 분명히 인정하는 편이 오히려 나을 것이다. 현행 대통령 중심의 판사 임명 방식을 바꾸어 입법부와 정당의 영향력을 강화함으로써, 정치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법부의 지나친 정치 개입을 줄이거나, 아니면 정치적 책임성을 증가시키거나, 이 두 가지 방안 중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면 사법부가 정치를 좌우하는 사법민주주의의 폐해가 앞으로 심각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 無等鼓

세월이 참 빠르다. 지난해 갑오년의 시작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을미년 새해가 밝았다. 그래서 조상들은 '세월이 유수(流水) 같다'고도 하고 '화살처럼 빠르다'고도 표현했나 보다.

고사성어에 광음여류(光陰如流)라는 말이 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다. '광음'(光陰)은 시간이나 세월을 뜻하는 말이고 '여류'(如流)는 빠른 물살과 같다는 뜻이다. 결국 세월이 물의 흐름처럼 빠르게 흘러 간다는 의미다. 세월의 빠름은 또 같고 같은 빠른 동물에 비유되기도 한다.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면 참으로 사건·사고가 많았던 것 같다. 송과 세 모녀 자살 사건을 시작으로 세월호 참사, 운 모 일병 사망 사고, 비선실세 국정 개입 의혹 사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명공 회향'에 이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까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대형 사고와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왜 유독 21세기 민주주의의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터진 것인지... 참으로 잔인하고 참혹한 세월이었다.

그래서인지 국민들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 연말 안전처가 밝

힌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에 따르면 2014년 하반기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는 답은 21.0%에 불과했다.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상반기 23.9%보다 체감안전도가 더 낮아졌다. 전년도 하반기의 안전 체감도는 22.3%였다. 반면 '안전하지 않다' 또는 '불안하다'로 해석되는 응답은 상반기 39.0%에서 42.6%로 상승했다. 전년도 하반기의 29.5%와 비교하면 10%포인트 이상 치솟았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한국사회의 불안감으로 인해 50%에 가까운 여대생들이 결혼을 생각하지 않고 있고 6명 중 1명은 자

녀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그만큼 어둡고 암울하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지난 8월 대한민국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우리에게 '화해와 화합'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교황은 시골과 신흥국가 아닌 진심을 처음부터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위를 내려놓고 상대를 배려하며 소통을 일깨워 주었다. 2015년 이 땅의 리더들도 대한민국을 위해 교황의 메시지를 실천하며 희망을 전파하기를 소망한다.

최재호 사회부장 lion@kwangju.co.kr

## 희망의 나라로

## 차 히터 난방 줄음운전 유발... 튼튼이 환기를

겨울철에는 눈길 운전 등으로 생긴 정제 현상과 추위를 막고자 틀어놓은 히터로 인해 줄음운전 사고가 발생한다. 줄음운전은 자칫 사고로 이어져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는 만큼 사전에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운전 경험이 있는 537명을 대상으로 최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들 가운데 26.1%인 140명이 줄음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자 10명 중 2.6명이 줄음운전을 한 셈이다. 특히 전체 537명 중 교통사고 경험이 있는 운전자 102명 가운데서는 줄음운전 경험 비율이 37.3%로 매우 높았는데, 이는 줄음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겨울철 추위를 피하기 위해 히터를 틀고 운전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줄음운전을 하게 될 수 있다. 게다가 눈이 쌓인 도로를 운전하게 되면 몸도 나른해지고 자동차도 천천히 움직이게 돼 조용한 진동과 소음으로 졸기가 딱 좋은 환경이 되어 버린다. 이런 때일수록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이진제·광주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하루를 정직한 농사/이 세상 가장 깊은데 심어/ 가장 늦은 날에/ 씨를 보나니

세상을 뜨거운 정열과 몸짓으로 사랑하셨던 지선스님은 '남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영화의 소감을 이토록 고즈넉

사람은 정직한 농사/이 세상 가장 깊은데 심어/ 가장 늦은 날에/ 씨를 보나니

세상을 뜨거운 정열과 몸짓으로 사랑하셨던 지선스님은 '남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영화의 소감을 이토록 고즈넉

## 기고

## 광주일보로 여는 희망찬 새해



최 산 호 전 옥곡과 교사

한 시로 대신하셨다. 광주일보에서 이 기사를 읽고 한달음에 영화관으로 달려갔고, 하염없이 눈 내리는 메타세쿼이아 산책로를 먹먹한 마음으로 되짚어 집으로 돌아오면서 짧은 소회를 되뇌고 있었다.

꽃 낙엽 나가지 바람결에 스며든 알뜰한 사랑조차도 무상하여 좋더라

스님의 멋진 시가 실렸던 그날 신문의 1면엔 눈부신 무등산의 설경이 시만큼이나 가슴을 쿵쾅거리게 하였다. 광주일보 제호랑 함께 스크랩하여 붙여두었더니 싹틔 눈이 부족한 날엔 창밖 대신 바라보면 이내 흡족하여 배시시 웃음 한 번 짓게 된다. 그리고 기쁨 있고 위풍당당한 광주일보 제호가 이 고장의 상징이자 수호신인 무등을 잘 지켜주는 듯 하여 볼수록 뿌듯하다.

우리 집은 여러 해 동안 세 가지 신문을

구독하고 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간편하게 떨마날 정도의 많은 정보를 접할 수도 있는 세상이지만 서적대는 종이만 한 촉감과 아날로그방식으로 정보를 찾아가는 가치와 즐거움을 좋아해서 신문 읽기는 더없이 소중한 일상이다.

지금은 타지에서 대학에 다니는 두 아이가 어렸을 적엔 광주일보를 서로 먼저 차지하려는 쟁탈전이 심각할 지경이었다. 아이들의 동당 거리는 발걸음 소리가 들리지 않는 지금도 남편과 난 광주일보를 먼저 보겠다고 이른 새벽부터 가벼운 신권전을 벌이곤 한다. 물론 전국적인 뉴스는 남은 두 신문에서도 열마든지 알 수 있지만 하지만 광주라는 우리 지역 사회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소식들이 궁금하기도 하고 애정이 가기 때문일 것이다.

남들 보기엔 좀 이른 나이이고 나 자신이 판단하기에는 아주 적절한 나이에 명예퇴직(아무리 생각해도 그다지 명예스러울 것 까진 아니다..)을 하고 씩씩하게 교문을 나온 2014년 한 해 동안 광주일보가 퇴직자의 첫걸음을 알차게 내딛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다. 눈을 크게

##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 24면 발행·호남 최대부수 광주일보 062-222-8111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국문·영문·베트남·태국어))		광고문의 062-222-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치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광고매체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